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5. 12. 24(목)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안보정책과장 박용우, 서기관 이유진 (Tel. 044-200-2123~4) 6·25전쟁 남북 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추석용, 사무관 김예린 (Tel. 02-2020-2510~1)
<p>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p>			

6.25전쟁 중 납북자 187명 추가 결정, 총 4,423명

- 납북피해 신고는 12.12일로 마감, '11.1월부터 5년간 총 5,505명 신고
- 2016년부터 납북피해 진상조사 보고서 편찬, 납북피해 기념관 건립 본격화

□ 정부는 제20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87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

○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4,423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 조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 차관) 심의를 거친 226명을 심사하여, 이 중 187명을 '납북자 결정'으로, 4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35명을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했다.

□ 한편, 2011년 1월 3일 시작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는 총 5,505명을 끝으로 지난 2015년 12월 12일 마감되었다.

○ 5년간 접수된 피해 건 5,505명 중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25명을 제외한 5,480명은 납북자 가족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연 평균 1,000명 이상에 달한다.

○ 구체적으로는 서울 1,783명, 경기 1,543명, 강원 442명, 충북 372명 등으로 납북피해가 집중된 중부 지방이 75.3%(4,14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는 현재까지 처리된 4,927명을 제외한 미결건 478명은 '16년 9월까지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위원회는 지금까지 조사가 마무리된 납북피해 사실을 토대로 납북피해 진상조사 보고서 편찬과 납북피해 기념관 건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기념관은 2016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6년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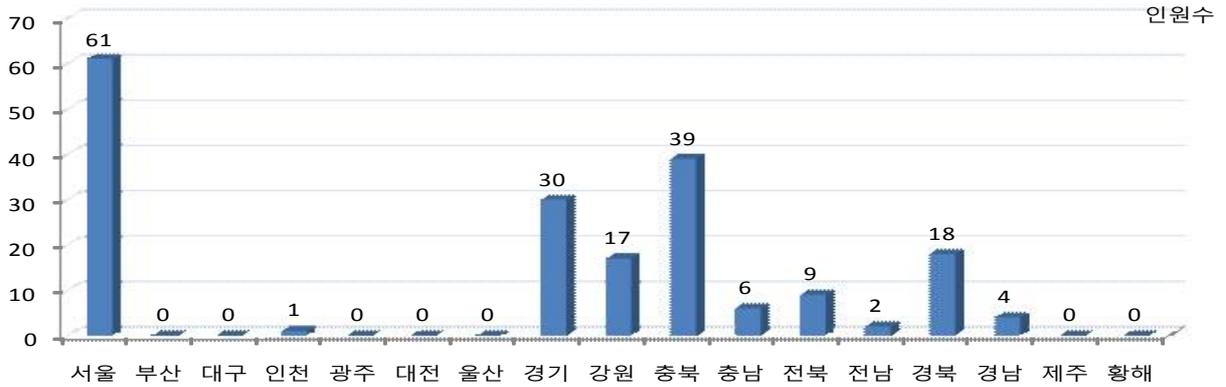
○ 위원회 사무국은 이와 관련하여, 6.25전쟁납북 관련 전시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증 희망자의 접수 (연락처 : 02-2020-2526)를 받고 있다.

※ 불 입

1. 납북 결정 통계 자료
2. 위원회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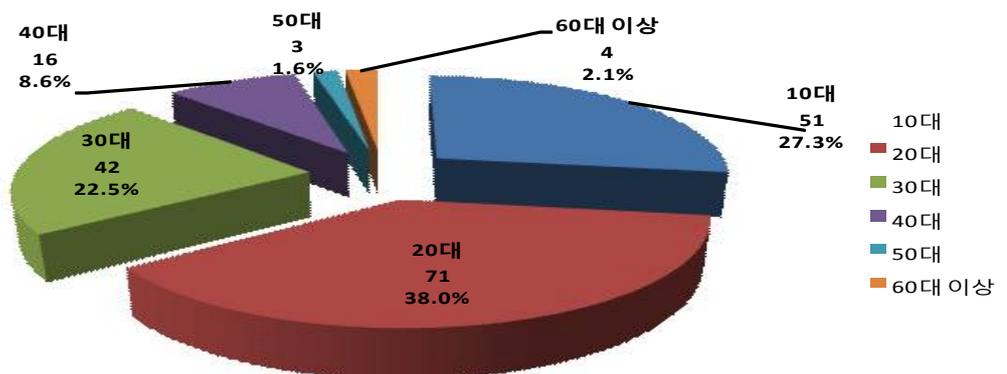
남북자 결정 187명 기본 통계 자료(제20차 위원회)

□ 거주지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계 (187)	61	-	-	1	-	-	-	30	17	39	6	9	2	18	4	-	-
비율 (%)	32.6	-	-	0.5	-	-	-	16.1	9.1	20.9	3.2	4.8	1.1	9.6	2.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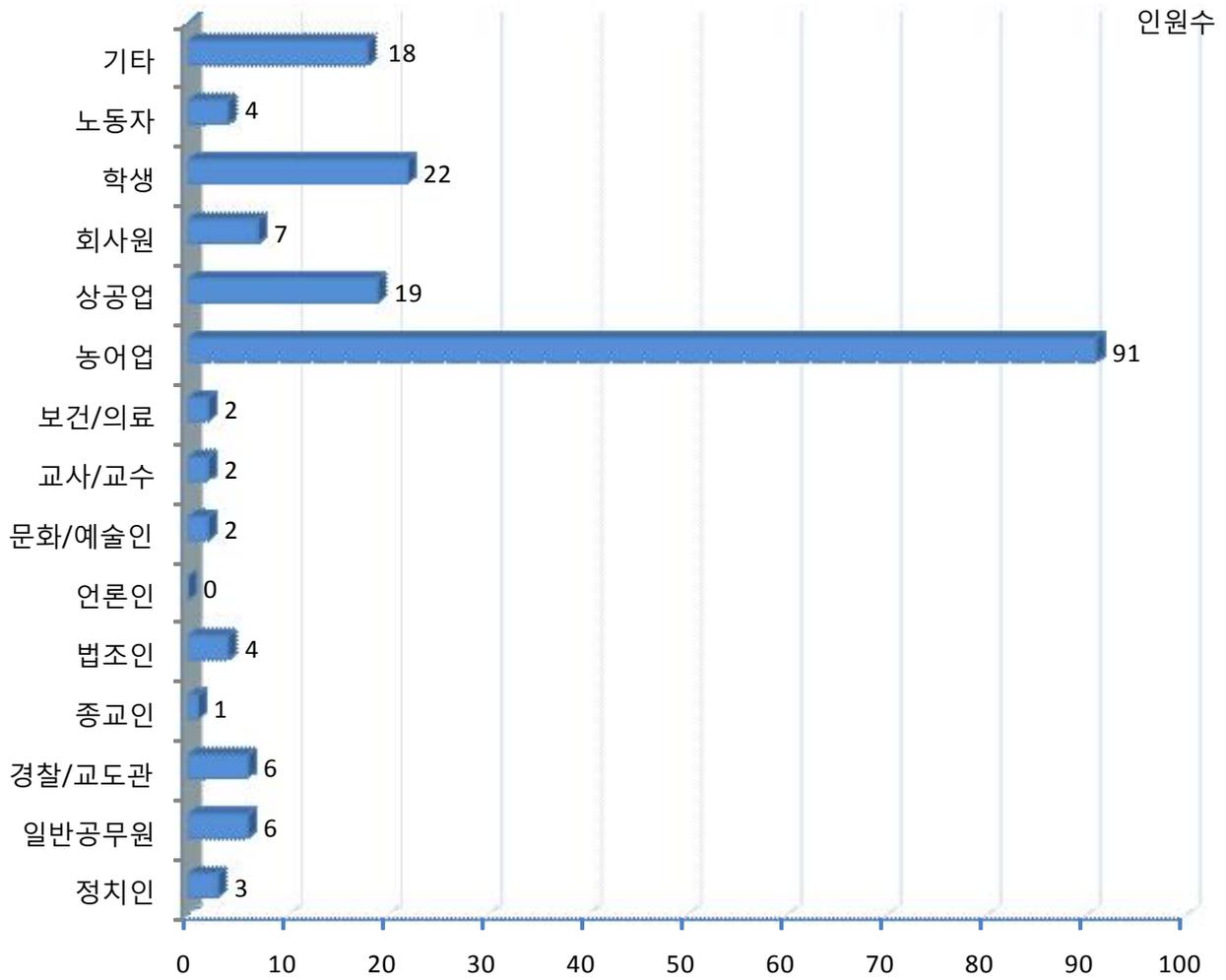
□ 연령별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187)	51	71	42	16	3	4
비율 (%)	27.3	38.0	22.5	8.5	1.6	2.1

※ 성별 : 남성 185(98.9%), 여성 2명(1.1%)

□ 직업별 현황



구분	정치인	일반공무원	경찰·교도관	종교인	법조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교사·교수	보건·의료	농어업	상공업	회사원	학생	노동자	기타
계 (187)	3	6	6	1	4	-	2	2	2	91	19	7	22	4	18
비율 (%)	1.6	3.2	3.2	0.5	2.1	-	1.1	1.1	1.1	48.7	10.2	3.7	11.8	2.1	9.6

납북자 결정 4,423건의 기본 통계 자료('15.12월 기준)

□ 거주지별 현황

구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계(4,423)	1,546	2	4	82	7	5	-	893	537	517	221	68	89	381	68	-	3
비율(%)	34.9	0.1	0.1	1.9	0.2	0.1	-	20.2	12.1	11.7	5.0	1.5	2.0	8.6	1.5	-	0.1

□ 연령별 현황

구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4,423)	1,032	1,749	932	450	210	50
비율(%)	23.3	39.5	21.1	10.2	4.8	1.1

※ 성별 : 남성 4,317명(97.6%), 여성 106명(2.4%)

□ 직업별 현황

구분(명)	정치인	일반 공무원	경찰·교도관	종교인	법조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교사·교수	보건·의료	농어업	상공업	회사원	학생	노동자	기타
계(4,423)	69	344	158	42	69	33	16	138	62	1,850	569	195	410	60	408
비율(%)	1.6	7.8	3.6	0.9	1.6	0.7	0.4	3.1	1.4	41.8	12.9	4.4	9.3	1.3	9.2

남북피해 신고 접수 5,505건 통계

1. 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11.1.3.~2015.12.12.(5년)
 - 당초 : 2011.1.3.~2013.12.31.(3년)
 - 연장 : (1차) 2014.12.31.까지 / (2차) 2015.12.12.까지

2. 접수 및 처리 현황

- 총 접수건수 : **5,505건**(’11년 1,034, ’12년 1,623, ’13년 1,453, ’14년 829, ’15년 566)
 - 신고접수 : 5,480건[시군구 5,438, 국외 42 / 서울·경기·강원·충북 4,140(75.3%)]
 - 기 타 : 25건(구세군 서울후생병원 약대원 18, 서울의대 교수 7)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외	기타
5,505	1,783	121	94	323	43	109	28	6	1,543	442	372	123	48	52	258	82	11	42	25

- 처리 현황
 - 위원회 이송 : **5,285건**
 - * 처리 4,927건, 미처리 258건, 중복·취하 100건(중복 55, 취하 45)
 - 위원회 결정 : **4,927건**(납북자 결정 **4,423**, 비결정 118, 판단불능 386)

6 · 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및 사무국 일반 현황

1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

- 설치 목적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 설치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 3항(‘10. 3. 26. 제정, 9. 27. 시행), 동법률 시행령 제2조

2 위원회 주요 기능

-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
 -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3 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4 사무국 구성

-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32명으로 구성 (공무원 13명, 상근계약직 19명)

5 운영 현황

- ‘10.12.13. 구성이후 총 20회 개최(연 3~5회, 대면 7회, 서면 13회)
- 위원회 상정 4,927명(납북자 결정 4,423, 비결정 118, 판단불능 386)